

2015년 2월 14일 시행 /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학개론 기출해설

김재규경찰학원 김재규 교수

※ 참고자료 : ▶ 기 - 기본서 경찰학개론(2015년 전정2판, 김재규 저)
▶ 객 - 객관식 경찰학개론(2014년 전정판, 김재규 저)
▶ 토탈 - TOTAL기출문제 경찰학개론(2015년 개정판, 김재규 엮음)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 ② 정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 친족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㉕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㉖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 ④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 ②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 ③ 「형법」 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 ④ 무기를 소지한 자가 3회 이상 투기·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6.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㉒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㉔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㉕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③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6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2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 ④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8. 「국가재정법」 상 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9.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②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 급비밀·II 급비밀 및 III 급비밀로 구분한다.
- ③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 급비밀로 한다.
- ④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 급비밀로 한다.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갈죄 ② 주거·신체수색죄
- ③ 약취·유인죄 ④ 명예훼손죄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으로 한다.

- ① ㉠ 금고 ㉡ 3년 ㉢ 2년
- ② ㉠ 금고 ㉡ 3년 ㉢ 3년
- ③ ㉠ 자격정지 ㉡ 2년 ㉢ 2년
- ④ ㉠ 자격정지 ㉡ 2년 ㉢ 3년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 ② 녹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③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④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2. 정답 ①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틀린 설명이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15조 제1항).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동강령 제4조 제1항).

3. 정답 ④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동징계령 제4조 제2항).

㉢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징계령 제14조 제1항).

㉤ 동징계령 제5조 제2항

4. 정답 ④

해설 ①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5조 제2항

② 동법 제6조

③ 동법 제9조

④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 직무의 범위 제2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다.

[직무의 범위(동법 제2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5. 정답 ①

해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의 경우는 「경찰관직무 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동법 제10조의4 제1항).

[「경찰관직무 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동법 제10조의4 제1항)]

무기사용 시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	① 범인의 체포를 위해 ②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사용 시 위해가 수반될 수 있는 경우	①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1년 ×)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③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④ 제3자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⑤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범인·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⑥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6.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경찰관직무 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경찰서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6항
-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7. 정답 ①

해설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경찰공무원법이 아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 ② 경찰공무원법 제8조의2
③ 동법 제11조의2 제1항
④ 동법 제10조 제1항

8. 정답 ④

해설 ① 국가재정법 제42조

- ② 동법 제43조 제2항
- ③ 동법 제44조
-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45조).

9. 정답 ④

해설 ①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 ② 동규정 제4조
- ③ 동규정 제4조 제1호
- ④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동규정 제4조 제3호).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동규정 제4조 제2호).

10. 정답 ③

해설 ③은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영역성의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11.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호
-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호).
-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
- ㉣ 동법 제7조

12. 정답 ③

해설 약취·유인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

「형법」 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시행일 : 2015.7.1.],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13. 정답 ③

- 해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 ② 동법 제12조 제2항
 - ③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동법 제12조 제3항).
 - ④ 동법 제12조 제4항

14. 정답 ①

해설 설문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선수승화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선수승화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	--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쟁행위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연정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15. 정답 ③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②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③ 2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④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6. 정답 ④

해설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동법률 제5조 제1호

③ 동법률 제8조 제2항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7조 제1항).

17. 정답 ②

해설 정보의 분류 중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는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이다.

[정보분류의 기준]

기 준	종 류
성질(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국가정보), 전문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對情報)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출처, 비밀·공개출처
입수형태에 따른 분류	직접정보, 간접정보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산업정보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분석형태(기능)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찰업무에 따른 분류	보안·범죄·외사·일반·교통정보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인간정보, 기술정보
내용에 따른 분류	국내정보, 국외정보

18. 정답 ①

해설 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19. 정답 ③

해설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동법률 제4조 제2항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동법률 제4조 제4항).

④ 동법률 제4조 제3항

20. 정답 ②

해설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이다. 녹색수배서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체포수배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수배서 중 가장 중요
청색수배서	국제정보조회 수배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이 주목적
녹색수배서	상습전과자 통보,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황색수배서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파악 목적
흑색수배서	변사자 수배서, 신원불상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장물수배서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자주색수배서	범죄수법수배서, 새로운 범죄수법 등에 대한 관리 및 배포
오렌지 수배서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스페셜 수배서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제를 목적으로 발행